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동아시아 질서

국방국가 구상과 ‘초근대’의 상상*

정지희

1. 머리말: 국방국가와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

일본사학자 스테판 다나카(Stefan Tanaka)는 근대성이 ‘서양’의 문명과 동일 시되곤 하던 근대 초기 일본의 지도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난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것으로 주어진 ‘동양적’(Oriental)이라는 범주를 떨쳐내고 그럼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¹ 근대는 보편적이면서도 ‘서양’의 것으로 상상되곤 했고, 일본의 정체성은 이러한 근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재(再)정의되었

정지희(鄭知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후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UCSD) 사학과에서 통전기(通戰期) 일본의 라디오 방송과 대중의 국민화·시민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도쿄대 정보학원(情報學環) 포스닥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전문 분야는 일본근현대사와 미디어 연구이며 공저로 *The Affect of Difference*(Univ. of Hawai'i Press, 2016), 『響きあう東アジア史』(東京大学出版会, 출간예정)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The American Way of Life Rearticulated in Occupied Japan”(2018),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2016)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EAHF-2018-기획연구[공동]-2-3-2-2).

<https://doi.org/10.29154/ILBI.2019.20.278>

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는 일본이 위와 같이 상상된 근대를 상대화하고 동아시아(東亞)의 범주 속에 스스로의 위치를 구축하여 국가정체성을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도드라졌던 시기다. 이 글은 당시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어로 널리 사용되었던 국방국가(國防國家) 개념에 착목하여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을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질서 재고 및 국가정체성 재구축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다.

파시즘이나 총력전 체제 연구에서 언급되는 빈도에 비하면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 자체를 본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파시즘 체제나 총력전 체제와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오인되는 탓도 크다. 국방국가를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는 경우, 군부나 혁신관료의 ‘국가개조’·‘국방국책’ 구상의 발전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거나 일본 파시즘·총력전 사상사 혹은 정책사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대부분이다.² 비교적 최근에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극복할 논리를 구축하고 사상의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로 국방국가 구상에 참여했던 자유주의 지식인의 내적 논리를 분석한 연구가 나왔으나 국방국가 자체보다 입헌주의 변용에 초점을 뒀다.³ 국내에도 동아신질서, 동아연맹,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과 같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전시 일본의 동아시아 광역질서 구상을 다룬 연구에 비해, 동시기 일본 국가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었던 국방국가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만주국에서 실시된 국방국가 정책 실험과 이시와

1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한국어판은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p. 3.

2 荒川幾男, 「国防國家の思想と大東亜共榮圈の問題」, 『近代日本思想史大系 第2巻 近代日本社会思想史Ⅱ』, 有斐閣, 1968; 橋川文三, 「国防國家の理念」, 『近代日本思想史大系 第4巻 近代日本政治思想史Ⅱ』, 有斐閣, 1970; 吉田裕, 「満州事変下における軍部: 〈国防國家〉構想の形成」, 『日本史研究』 通号 238, 1982. 6, 39~74쪽; 吉田裕, 「『軍財抱合』の政治過程」, 『歴史評論』 408号, 1984. 4, 23~43쪽; 吉田裕, 「国防國家」の構築と日中戦争」, 『一橋論叢』 92巻 1号, 1984. 6, 37~54쪽;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影書房, 1996의 第5章 「〈国防國家〉小論: 日本ファシズム研究の基礎範疇」, 121~135쪽.

3 源川真希, 『近衛新体制の思想と政治: 自由主義克服の時代』, 有志社, 2009, 94~101쪽.

라 간지(石原莞爾)의 국방국가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존재하는 정도다.⁴

선행연구의 상대적 빈약함은 국방국가가 채 실현되지 않은 구상이었던 탓이 크다. 유럽과 일본 근현대사상사 연구자인 아라카와 이쿠오(荒川幾男)는 국방국가 사상을 연구하는 어려움을 “쉽사리 실체를 잡을 수 없는 환영을 마주하는 것”에 비유했다. ‘사상’으로 취급하기에는 “성숙할 틈조차 없었던” 체제이자, “원리로서 초월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는 실무 사상”에 불과한 탓이라는 것이다.⁵ 다만 전시와 전후 사이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전후의 시각 아래 전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된 이데올로기로 국방국가 구상을 과소평가하거나 단죄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과 국방국가 구상에 대한 오랜 경시가 무관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독일 개념 ‘Wehrstaat’의 번역어인 ‘외래성’에 집중한 나머지 당시의 국방국가 구상에서 일본의 고유성이나 차별성이 어떻게 상상되고 설명되었는지는 진지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⁶ 오히려 고유성이나 차별성은 전후 시각에서 일본 근대화 행로의 ‘예외성’ 내지는 근대화의 ‘정상’ 경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여겨지곤 했다. 국방국가는 ‘일본형 파시즘 체제’로 불리기도 했는데, 파시즘 체제 자체가 근대의 정상적인 경로로부터 이탈한 역사적 파생물로 이해되고, 일본은 그중에서도 아래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위로부터의 파시즘’, 혹은 같은 이유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달리 대외 군사침략이 국내 체제 개조에 선행한 ‘외선내후’형(外先內後型)의 특수한 파시즘 체제라는 설명이 주어졌다. 즉, 전시 일본의 파시즘 체제를 국방국가라 규정할 수 있다면, 이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파시즘 국가’였기 때문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⁷

4 임성모, 「‘국방국가’의 실험: 만주국과 일본파시즘」, 『중국사연구』 16집, 2001, 191~235쪽; 박영준, 「일본 군국주의의 한 내면(內面):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에 있어 ‘세계최종전쟁론’과 ‘국방국가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집 2호, 2016, 107~135쪽.

5 荒川幾男, 「国防國家の思想と大東亞共榮圈の問題」, 178쪽.

6 예를 들어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8쪽.

7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46~147쪽. 군부가 내놓은 구상에서 국방국가는 총력전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되곤 했다. 군부는 국내 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대외침략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점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방국가 체제는 총력전 체제의 동의어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혁신이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국방국가는 군국주의의 동의어로 치부하거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환언할 수 없는 울림을 가진 용어였다. 국방국가 구상은 군부의 전유물도 아니었다. 혁신관료와 좌·우파를 막론한 지식인들 또한 중층적이며 때로는 군부의 구상과 충돌하는 국방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냈다. 국방국가 구상을 ‘사상’ 체계로 다룰 수 없었던 아라카와 이쿠오도 약 10년간 ‘국방’의 이름으로 제기된 반론 앞에 웬만한 이론이나 방책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전전 쇼와(昭和)시기 내내 일종의 ‘주술적인 힘’을 발휘했던” 개념이라 평했다. 아라카와는 “하나의 신조(言葉)로 자리 잡을만한”, ‘국민적 규모의 경험’이 존재한 터라 “단순한 환영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중량감”을 지님을 지적하기도 했다.⁸

체제의 완결성이나 사상의 정합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방국가 구상의 역사적 ‘중량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후지타 쇼조(藤田省三)는 국방국가가 “국민을 속여 유혹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혁신운동’을 추동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추동력은 국방국가의 실체나 정책보다도 근대 국가의 이미지나 현실을 초월한 사회상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후지타는 “‘고도국방국가’의 이미지가 일본 국민의 ‘근대화’를 향한 여망을 떠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일본의 고질적인 ‘세계정세 추수주의’로 설명했다.⁹ 이러한 접근은 중국에는 외래성에 기인한 예외성과 결여를 강조하는 시선으로 귀결된다.

이 글은 후지타의 논의를 심화시켜 일종의 사회적 상상의 매개물로서 국방국가 구상이 지녔던 파급력을 설명해보려 한다. 그러나 초점을 이동시

선결되지 않는 한 범아시아 협동체 구상은 불가능함을 주장했던 국방론자들도 존재했다. 전쟁을 국내 혁신을 추진할 실천적 계기로 삼으려는 조류도 뚜렷하게 존재했다. 그럼에도 국방국가 구상을 단순히 군국주의 사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21세기에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佐藤卓己, 『言論統制: 情報官・鈴木庫三と教育の国防国家』, 中央公論新社, 2004, 256~257쪽.

8 荒川幾男, 「国防国家の思想と大東亜共栄圏の問題」, 177~178쪽.

9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탐 율김, 『근대 일본 사상사』, 소명출판사, 2006, 338~340쪽. 한국어 번역서는 각 장의 저자명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나, 원저(家永三郎 編, 『近代日本思想史講座 第1巻: 歴史的概観』, 筑摩書房, 1959) 서문(16쪽)에 따르면 인용한 3편 3장의 저자는 후지타 쇼조다.

켜 국방국가 구상을 통해 담론화된 국가의 이미지나 사회상을 당시 일본의 국가정체성 구축 시도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국가정체성이란 제도적 틀인 국가체제의 고유성과 구성주체인 국민/민족 공동체의 차별성을 규정하고¹⁰ 국가 구성원에게 이 규정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제를 통해 구축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방국가는 당시 군지도자뿐 아니라, 혁신관료, 지식인이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상상하고 구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했던 개념 중 하나로 재조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정체성 재구축 과정은 일본의 동아시아 및 세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와 긴밀히 연동하였다.

특히 군부의 경우 다가올 전쟁을 필연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군사적 필요, 즉 협의국방에 집중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강했다면, 세계사적 전환기라는 당대 인식 아래 국가체제로서 국방국가를 구상하려 했던 담론들은 협의국방 강화에 더해 항구적인 체제 개혁으로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에서 일본의 위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기획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 글은 당시 국방국가론, 특히 군국주의로 직결되는 협의의 국방국가론보다는 포괄적인 체제 개혁을 추구하는 광의국방 혹은 고도국방 이념에 근거를 둔 혁신관료와 지식인의 논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본을 선진적인 ‘현대’ 국가로 새롭게 상상하고 아시아의 패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화하는 매개로서 국방국가 개념이 동원되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담론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에 세계정세 추수주의를 극복하려는 지향이 개입했음을 환기할 것이다. 국방국가 구상이 일본의 전시 공간에서 ‘주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일본적’ 혹은 대안적 근대화의 여망이 투영되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여망이 투영되었음을 조명하여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이나 국가정체성 구축 시도를 긍정하거나 그러한 여망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망이 국가정체성을 상상하는 데 어떠한 제

10 김상준, 「국가정체성과 국제관계」, 현대일본학회 월례회 발표문, 2018. 4. 14, 2쪽.

약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2장과 3장에서는 새로운 국방 개념의 대두와 국가체제로서 국방국가 개념의 등장을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 구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국방국가가 유럽의 근대를 역사화하고 상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상상할 수 있는 개념 틀로 작용했음을 보일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서양’의 근대국가를 초월하는 침단의 국가체제이자 국방국가 가운데에서도 국방국가 이념을 최고도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을 상상하기 위해 동원된 논리와 장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국방국가 구상을 국가정체성 재구축 시도로 다시 보면, 전시 일본의 대안적 근대화를 향한 여망이 근대성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성의 침단을 선택하려는 데 그쳤음이 더욱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 서양 근대를 넘어서려는 일본의 여망을 설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대의 초극’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초(超)근대’(ultramodernity)의 상상이라는 표현이 국방국가 구상을 이해하는 데 더욱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¹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방국가 구상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국가정체성 구축 시도를 위의 틀로 설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초근대’로 상상된 국방국가라는 국가정체성을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11 제니스 미무라(Janis Mimura)는 전시 일본의 혁신관료들이 기술관료로서 ‘초근대 일본’(ultramodern Japan)이라는 구상을 추진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초근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혁신주의 기술관료들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보다 나은 대안적인 근대로의 경로를 찾으려 했으며, 일본도 기술관료 중심의 근대성(technocratic modernity) 추구라는 전 지구적 경향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음은 분명히 했다. Janis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한국어판은 제니스 미무라, 박성진 옮김, 『제국의 기획: 혁신관료와 일본 전시국가』, 소명출판, 2015), p. 1, p. 5, p. 8. 본고에서는 ‘초근대’라는 용어가 주는 울림에 주목하여, 전시 일본의 혁신관료와 지식인들이 동시대적 근대성에 동참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대를 넘어선 것으로 상상했던 ‘현대’, 즉 당시에 근대를 초월한 것으로 명명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가장 선전의 혹은 침단의 근대’의 범위 안에 머물렀던 상상을 통칭하기 위해 ‘초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근대 국방' 개념의 대두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례 없는 총력전 경험이 초래한 국가이념의 변용과 연동하여 국방 개념이 이야기된 것은 전간기(戰間期)부터의 일이다. 도래할 전쟁 또한 국민 생산력 총동원을 수반하는 장기 지구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국가체제와 사회조직 전체를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 개념이 주창되었던 것이다.¹² 독일에서 단순한 '군사 범주'를 넘어 '정치 범주'로 재규정되었던 국방 개념은 일본에서도 전시뿐 아니라 상시를 위한 광범위한 체제 혁신의 필요성과 역사적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¹³ 특히 세계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제 모순이 한층 심화된 형태로 노정되고 만주사변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준(準)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군부와 혁신관료·지식인이 정당정치와 위싱턴 체제, 즉 국내외 기성 정치질서를 공격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조를 주장하는 논리로 국방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방 개념을 널리 알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로 흔히 1934년 육군성신문반(陸軍省新聞班)이 간행한 『국방의 본의와 그 강화의 제창』(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이하 『국방의 본의』)이 거론된다. 육군 통제파(統制派) 이케다 스미히사(池田純久) 소좌 등이 민간 정책연구·입안기관인 국책연구회(国策研究会)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고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육상의 승인을 얻어 발표한 글이다. 국가와 사회를 재조직하여 국내외 경제 위기와 위싱턴 체제에 입각한 대외관계의 현상(現狀)을 타파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군이 소책자 형태로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택한 탓에 많은 논란과 찬반 논의를 초래했다.¹⁴

12 橋川文三, 「国防國家の理念」, 232~233쪽.

13 독일에서 국방 개념은 '전쟁' 개념, 즉 '무력 전쟁의 상위개념'으로서 후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국방은 단순한 '군사 범주'를 넘어선, '정치 범주'로서 일본에 소개되었다. 五十嵐豊作, 『国防政治の研究』, 日本評論社, 1945, 90쪽 참조.

14 발표 당시 일어난 첨예한 논쟁으로 '육군팸플릿 사건' 혹은 '육팸 사건'으로 불린다. 미노베 다쓰키치

『국방의 본의』는 우선 당시를 ‘세계적 불안’의 시기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증유의 정치, 경제적 불균형, 불안전’은 “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낭비에 기인한 결제난(決濟難)과 베르사이유 조약의 비합리적인 처리” 탓에 초래된 것으로 설명한다. 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 불황과 ‘국제관계의 난맥’이 정치·경제에 ‘국가 간의 블록(block)화된 대립관계’를 생성하여 “국제 생존경쟁이 최고조에 달한(白熱) 상태”라는 것이 이 글의 현상(現狀) 인식이다. 이 현상 인식에 따르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이미 ‘심각한 경제전·사상전’이 전개되어 “국가의 모든 활력을 종합통제하지 않으면 무력전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국제경쟁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목하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국방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와 “종래 무력전쟁 본위의 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사상을 발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현상 진단에서 군비와 무력전 위주의 ‘군사적 국방관’이나 전쟁은 군대가 전담하고 국민은 총후 지원에 그치는 ‘국가총동원적 국방관’을 ‘재검토’하고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근대 국방관’을 채택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 국방관’이란 국방을 ‘국가생성발전의 기본적인 활력 작용’으로 정의하고, “국가의 모든 활력을 최대한 발양(發揚)시키도록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을 ‘국방국책의 목표’로 규정하는 시각이다.¹⁵ 협의의 국방 강화 이상의 국가개조 구상을 포괄하는 이러한 국방에 대한 이해는 당시에 이른바 ‘광의국방’이라 지칭되기도 했다.¹⁶

『국방의 본의』는 이러한 국방관에 입각하여 ‘국방력 구성’의 ‘인적 요소’로 규정된 국민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 농·산·어촌의 갱생, 국민교화 진흥 등의 국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군비확

(美濃部達吉) 같은 리버럴 헌법주의자로부터 ‘호전적’·‘군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진 한편, 도사카 준(戸坂潤)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부터는 군이 실업가와 지주, 그들을 옹호하는 정당 정치인의 권익을 대변한 데 불과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橋川文三, 『国防国家の理念』, 235~236쪽.

15 陸軍省新聞班, 『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陸軍省, 1934, 2~7쪽, 27쪽

16 1940년대에는 주로 ‘고도국방’으로 지칭된다.

충은 물론이거니와 통제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기구 개혁과 전시경제 확립도 중요한 ‘국방국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후에 국방국가 구상과 ‘동아 신질서’·‘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뒷받침하게 되는 주요 논리도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부의 편제·계급 대립 관념 비판과 ‘도의적(道義的) 경제관념’과 같은 수정 자본주의 논리, 영국·미국과 같은 ‘소수 지배민족의 이익’ 추구가 “도의에 배치”되며 일본의 입장이 ‘세계대중’(=‘식민지 유색인종’)의 이익에 일치된다는 주장, 지정학 개념에 기초를 둔 ‘일만(日滿) 제휴’·‘세계 영구 평화’ 확립 주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⁷

반면 국가체제로서의 국방국가 개념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국방의 본의』는 흔히 군부가 품어오던 ‘국방국가 구상’을 대외적으로 알린 글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러나 이 글에는 ‘국방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체제로서의 국방국가 개념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 것은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1940. 7. 22~1941. 7. 18)이 「기본국책요강」(基本国策要綱)을 각의 결정하면서다.¹⁹ 「기본국책요강」은 ‘세계사적 대전환기’라는 인식 아래 “서정(庶政)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국방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각하의 긴급한 요무’(刻下喫緊ノ要務), 즉 국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²⁰

아베 히로즈미(安部博純)는 국방국가가 ‘전시체제’나 ‘광의국방’ 개념과 혼동되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국가체제로서의 국방국가는 이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방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나 전시체제와 같은 한시적인 ‘태세’를 넘어서는 ‘항구적인’ 국가체제 구상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별화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체제 안에서 군부의 지위가 향상하여 국방정책이 강화되는 식의 국방의 양적

17 陸軍省新聞班, 『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4쪽, 39~56쪽.

18 예를 들어 吉田裕, 「滿州事变下における軍部: 「国防国家」構想の形成」, 64쪽.

19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29~130쪽.

20 「基本国策要綱(昭和十五, 七, 二六 閣議決定)」, 企画院, 1941,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image/F1000000000000070420> (최종 검색일: 2018. 10. 30).

변화가 아니라 … 국가편성 원리의 전환, 즉 질적 변화”의 산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²¹

아베의 주장은 국방국가 구상과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함께 생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베가 분석한 대로 『국방의 본의』는 ‘국가개조 계획의 강령’에 해당하지만, 기존 국가체제 내의 개조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국방의 본의』에는 실제로 새로운 국가체제가 지녀야 할 ‘고유한’ 속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체제에 대한 애매한 규정은 세계체제 안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 내에서 일본의 위상이나 정체성이 뚜렷하게 설명될 수 없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t)의 네 가지 정체성 유형을 빌려 설명하자면, 정치체제에 따른 ‘유형 정체성’(type identity)이 불분명한 탓에, 타자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역할 정체성’(role identity) 또한 뚜렷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셈이다.²³

『국방의 본의』 단계에서 새로운 국방국책이 필요한 이유는 “황국의 이상을 계승하여 행하고(紹述) 격심한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나라(優者)가 되기 위함”으로 설명되긴 했다. ‘황국의 이상’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정신의 고조·확충’과 ‘세계 항구평화 확립’과 같은 표어들이 거론되었다.²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화하는 국제 생존경쟁에서 일본이 ‘낙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힘입어 새로운 국방 개념에 입각한 광범위한 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다. 일본은 ‘소국’(小国)·‘빈국’(貧国)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런던 군축회의로 노정된 영국·미국 위주의 현상유지 구도를 “강국이 자국 국방의 우위를 취하기 위한 책략”으로 비판하거나 후발제국주의 국가이자 비(非)서구 국가로서 ‘식민지 영유의 편파부당’, ‘인종적 편견’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에 유리하게 작용한

21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26쪽.

22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26쪽.

23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는 김상준, 「국가정체성과 국제관계」, 4쪽; Alexander Wen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24~230쪽.

24 陸軍省新聞班, 『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7쪽, 57쪽.

다.²⁵ 일본에 지정학적 논리에 입각한 생존권 개념으로 현상 타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국’·‘빈국’·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강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현상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의 본의』에는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의 수호자’라는 ‘천부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는 ‘동아의 외곽’, ‘중국·인도·남양(南洋)의 지근거리(指呼之間)’에 있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일본은 영·미 ‘강국’의 ‘이기적인 패도(霸道)’·‘우승열패’(優勝劣敗) 논리와는 차별화된 ‘파사현정’(破邪顯正)²⁶을 추구하며, 이러한 ‘황국의 대의(大義)’야 말로 ‘국방의 근간’이라 주장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고 중국의 옛 시장을 회복”하여 일본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야심 또한 가감 없이 드러내고 만다.²⁷

결국 『국방의 본의』는 기성 세계체제에 ‘도의적’인 비난을 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홉스(Hobbes)적인 투쟁 상태(희소자원을 둘러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가까운 국제질서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목표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단계의 ‘광의국방’ 구상은 만주사변과 국제연맹 탈퇴로 전개된 준전시체제라는 ‘비상시국’ 타파를 위한 정책 제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²⁸ 이는 국가정체성 담론으로서의 국방국가론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25 陸軍省新聞班, 『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13쪽.

26 불교 용어로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정법(正法)을 드러내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7 陸軍省新聞班, 『国防の本義と其強化の提唱』, 20쪽, 27쪽, 37쪽.

28 아베 히로즈미는 1930년대 중반에 제기된 국방정책은 ‘위기 돌파의 처방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24쪽.

3. ‘현대’ 국가로서의 국방국가와 세계사의 전환

『국방의 본의』에서 제시된 국방정책의 상당수는 2.26 사건 이후 거국일치 내각으로 성립한 히로타 고키(広田弘毅) 내각(1936년 3월 9일~1937년 2월 1일)이 발표한 서정일신(庶政一新) 정책의 ‘7대 국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히로타 내각부터 2차 고노에 내각 성립 이전까지는 재계와 정당이 통제경제 강화와 같은 국가개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광의국방 구상 가운데 정치·경제 정책이 후퇴하는 등, 체제 개혁은 타협일로에 있었다.²⁹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고 ‘국방국가 체제의 완성’이 국책으로 제시되기에 이른 계기는 중일전쟁의 지구전화와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1940년 6월 파리 점령으로 대표되는 대전 초 독일의 승전이었다.

1940년에 「기본국책요강」 각의 결정으로 체제로서의 국방국가 개념과 국방국가 체제 구상이 공식화되었고, 이는 ‘국가편성 원리의 전환’을 상징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 구축 시도와 긴밀히 연동하였다. ‘국방국가’는 전시 일본의 국가체제를 설명하고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일본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했다. 특히 군부 혁신파의 조력자이자 정당세력의 후퇴에 힘입어 국가정책 입안을 주도했던 혁신관료와 그들에게 협력한 지식인들의 담론에서 국방국가로 국가정체성을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에 입각하여 일본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논설에서 국가체제로서의 국방국가는 당시에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국방국가는 당시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긴 했으나, 그 가운데 가장 널리 회자되면서도 당시 군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던 혁신관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쿠무라 기와오(奥村喜和男, 1900~1969)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 수 있다.

29 荒川幾男, 「国防国家の思想と大東亜共栄圏の問題」, 187쪽;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27쪽.

국방국가란, 국방을 소중히 하는 국가라거나, 국방에 중점을 두는 국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한편 국방국가란 군인이 국가의 각 방면에 나서서 지도하는 국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 국방국가란 이런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래의 자유주의 국가의 국가관과 다른 의미의 새로운 국가관에 기초한 국가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종래의 자유주의 국가관은 국가의 기초를 개인에 두고 개인의 모인, 그 합계 혹은 그 결합관계에 국가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는 국가 혹은 민족의 가치에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으로 [국가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임무는 개인의 자유에 봉사하는 것이고, 개인의 생명·재산·영업의 안정과 자유를 보증할 수 있을 때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국가에서는 그러한 국가관을 부정·배격하고 개인의 생명도, 재산도, 영업도 모두 국가의 목적에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국가는 국가로서 개인의 모든 생활 부문을 지도하고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전체주의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국방국가는 이렇게 국가를 보는 견해가 자유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³⁰

오키타라는 당시를 대표하는 혁신관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후 체신성에 입사하여 무선과장(無線課長)을 지냈고, 동맹통신사와 만주전신전화회사의 설립에도 관여한 테크노크라트다. 1935년 내각조사국 조사관으로 발탁되어 소유와 경영 분리[소위 ‘민유국영’(民有國營)] 원리에 따라 통제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력 국가관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1937년 설립된 기획원에서도 조사관을 역임한 후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에서 내각정보국 차장을 지낸 핵심 관료였다.³¹ 잘 알려진 바처럼 내각조사국과 기획원은 혁신관료들이 국가 개조 및 관리 방안을 조사하고 입안하는 거점이었다.

30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報国の会, 1941, 9~10쪽.

31 奥村喜和男, 『変革期日本の政治経済』, さき書房, 1940, 365쪽 저자 약력 참조.

위의 인용문은 1940년 11월 27일 라디오로 방송했던 「국방국가로서의 일본」을 같은 해 본인의 저서 『변혁기 일본의 정치경제』(変革期日本の政治経済)의 종장(終章)으로 간행한 후, 보국의 회(報國の会)에서 ‘산업전사 마음가짐의 나침반’이라는 표제어와 함께 소책자로 다시 간행한 글의 일부다. 이후 1941년 기획원연구회가 편집·출간하고 194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5판까지 간행한 『국방국가의 강령』(国防国家の綱領) 2장 1절 「국방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도 일부 자구(字句)만 바뀐 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³² 전 국민을 청취자로 상정하는 방송, 일반 대중용으로 배포된 보국의 회 소책자, 기획원 출판의 국방국가 강령까지, 다양한 공식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된 설명인 셈이다. 당시 가장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국방국가관(觀) 가운데 하나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³³

위의 인용문에 기술된 것처럼 국방국가는 한 마디로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국방국가로서 규정된 일본이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체주의 체제 개념에 합치하는지는 따지지 않겠다. 국가정체성으로서 국방국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시 일본의 담론공간에서 국방국가를 규정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무엇으로 규정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후에 사후적으로 규정된 전체주의 개념은 주로 냉전 대두를 배경으로 파시즘과 소련 공산주의를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분석에서 유래했다. 이에 반해 당시 전체주의 국가로 자임한 국가들에서 전체주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배격할 수 있는 이념이자 체제 구상으로 각광 받았다. 전시 일본의 전체주의 논리를 변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당시 국방국가 구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문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은 지적해두려 한다.

오쿠무라의 인용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전시 일본에서 전체주의 국가

32 奥村喜和男, 『変革期日本の政治経済』, 326~338쪽. 방송 사실과 일자 표기는 338쪽;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国家の綱領』, 新紀元社, 1941, 20~23쪽.

33 이 글은 국가정체성 구축에 초점을 두는 만큼 혁신관료 개인 사이의 입장 차이를 해명하기보다는 공식적이고 대대적으로 유포된 국방국가 개념, 달리 말해 공약수에 가까운 개념에 집중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음을 밝혀둔다.

는 무엇보다 자유주의 국가의 대척점에 있는 체제로 상상되었다. 『국방국가
의 강령』 또한 “자유주의 국가는 비(非)국방국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체주의 국가의 고유한 속성은 자유주의 국가의 그것과 대비하여 설명되
었다. 위의 인용문이 시사하듯, 개인의 가치에 비해 국가나 민족의 가치가
선행한다는 믿음과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생활 전 영역에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는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속성으로
여겨졌다. 이에 더해 비국방국가인 자유주의 국가와 국방국가의 차이는 ‘정
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찾아졌다. “국방국가에서는 정치가 경제의 통제자
로 등장하나, 비국방국가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종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국방국가에서는 국무와
통수가 대립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국무와 통수가 완전히 일체화”한다고
설명되었다.³⁴

자유주의 국가와의 이항대립 관계로 국방국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대비
를 통해 체제의 차별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이항대립이 차
별성만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 것은 아니다.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관
련하여 주목할 만한 전제는 전체주의 원리에 따른 국방국가 자유주의 국
가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믿음이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생
존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동기라는 점에서 국방국가 구상은 앞선 광의국
방 구상 단계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는 국방국가로서의 일본
은 국제 생존경쟁에서 확실히 앞서나갈 수 있는 나라로 상상되었다는 점이
다. 국방국가는 전체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각종 기구를 새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국가·국민의
전 영역에서 총 활력을 국방에 결집시켜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이념으
로 하는 국가체제로 규정되었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영리주의, 국민 일반은 개인주의·공리주의가 지배하므로 국가총력

34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國家の綱領』, 22쪽.

의 집중·발휘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비되었다.³⁵

그리고 이렇게 상상된 국가체제의 우월성은 일본의 세계체제와 동아시아 질서 내의 역할정체성을 뚜렷하게 구축하는 작업과 긴밀히 연동하였다. 동아시아의 ‘지도자’이자 패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뚜렷이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국방국가이기 때문에 블록화된 세계질서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천명되었다. 앞서 소개한 오키후라의 『국방국가로서의 일본』은 “앞으로의 국제무대에서는 어느 나라도 국방국가가 아니고서는 자국의 존립을 이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수 국가의 지도자(예를 들어 동아를 지도하는 일본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 몇 개 국가군과 각축을 벌여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³⁶

국방국가 체제의 우월함에 대한 믿음은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승전 소식에 힘입은 것이었다. 특히 ‘국방국가’ 독일이 프랑스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를 상대로 신속한 승리를 거둔 사실은 국방국가 체제의 자유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국방국가 체제의 우월성은 단순히 전쟁에 최적화된 체제라는 차원을 넘어, 시의성을 잃어버린, ‘구시대적’인 자유주의 국가체제 모델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국가체제의 원리, 즉 선진성으로 설명되었다. 독일의 승전은 “모두 독일의 정치가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보다 우월한 탓”이며, “달리 말해 독일이 국방국가였던 데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 근대 국가 내지 자유주의 국가였던 당연한 응보이자 필연의 결과”였다는 것이다.³⁷

국방국가 체제의 우월성과 선진성의 상상을 거시적으로 뒷받침한 것

35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5쪽, 12쪽.

36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7쪽.

37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4~5쪽; 거의 같은 시기 스즈키 구라조(鈴木庫三) 또한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 스즈키는 육군장교이자 정보국 정보관으로서 국방국가 완성을 주장하며 언론통제와 교육에 집중했던 인물이다. 라디오 방송과 다수 논문에서 국방국가론을 전개했다. 스즈키는 “요컨대 독일이 이긴 근본 원인은 와신상담 과거 20년간 세계제일의 국방국가를 건설하여 그 종합력으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鈴木庫三, 『教育の国防国家』, 日黒書店, 1940, 7쪽. 스즈키의 구체적인 활동은 佐藤卓己, 『言論統制: 情報官・鈴木庫三と教育の国防国家』 참조.

은 세계체제와 세계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이후에 ‘세계사의 철학’으로 통칭되는 세계관이 바로 그것이다. 『국방의 본의』가 발표된 단계만 하더라도 당대는 세계사의 ‘불안기’ 내지는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국방국가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저작들은 예외 없이 당대를 ‘세계사의 전환기’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즉각 대응(卽應)할 수 있는 국가체제로서 국방국가를 지목했다. 「기본국책요강」만 하더라도 전문(前文)에 “세계는 지금 역사의 일대 전환기에 처한” 상태이며, 따라서 “세계 발전의 필연적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방국가 완성과 동아신질서 건설을 주창하는 취지를 밝혔다.³⁸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시점에서도 세계사의 전환은 이미 거론되었다. 오쿠무라 기와오도 1937년 11월 시점에 이미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버금가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정세로 말하자면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래 이것이면 족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치판단의 동요기랄지, 동트기 직전(夜明前)이랄지, 그런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논한 바 있다.³⁹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의 국방국가론은 당대를 ‘현대’로 규정하여 그 이전 시기를 ‘근대’로서 상대화하려는 인식과 함께 제기되었다. 이런 인식은 기획원 연구회가 편찬한 『국방국가의 강령』에 아래와 같이 표명되었다.

세계전쟁의 와중에 있는 현대는 거대한 세계사의 전환기다. 우리는 이 세계사 전환기의 의의를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의의는 이 세계전쟁으로 근대사회가 운영해온 생활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변혁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欧州戦争)은 근대 세계질서의 지배자인 영국에 대해 후진국인 독일이 같은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전쟁이었으나, 이번

38 「基本国策要綱(昭和十五, 七, 二六 閣議決定)」.

39 奥村喜和男, 『変革期日本の政治経済』, 75~76쪽.

의 세계전쟁은 신구(新舊) 세계관의 싸움이다. 그것에 큰 차이가 있다. … 지금 우리는 이 인류문화의 근대적 소산을 철저히 비판하고 검토하여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인류문화를 창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근대 세계질서를 지배한 … 자유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 유물주의의 세계가 몰락하고, 전체주의, 공익 우선주의의 한층 높은 인류 문화가 이것을 대신하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환기다.⁴⁰

자유주의 원리에 기초했던 ‘근대’보다 문화 발전 정도가 고도화된 ‘현대’가 도래했다는 인식으로부터 신구 세계관 교체의 필요성과 전체주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체제로서 규정된 국방국가의 ‘현대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근대’를 대체할 ‘현대’가 도래했다는 인식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지도 원리는 인류생활 전 영역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판단에서 세계사 전환의 필연성과 이러한 전환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도출된다. “인류사의 흐름에서 진보와 발전이 있으려면 지금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청산하고 방기하는 것이야말로 역사 필연의 운명이고 …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정신적 물질적 소산 위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체계를 창조하는 일이 지금의 역사적 과제이며 이 역사의 전환, 역사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다.⁴¹

전시 일본에서 당대를 ‘현대’로 인식하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총력전과 현대화’론 혹은 시스템론에 입각한 연구에서 1945년을 분기점으로 근대와 현대를 나누던 전후 역사학의 시대 구분을 비판하고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기간, 혹은 1차 세계대전부터의 시기를 이미 현대화 과정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정립된 바 있다.⁴² 다만 사

40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国家の綱領』, 3~4쪽.

41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国家の綱領』, 4쪽. 유사한 논리는 당대 국방국가 담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당시 외무성 혁신과 관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시라토리 도시오(白鳥敏夫) 역시 ‘자유주의 세계관의 사멸’을 선언하고 이러한 인식 위에 일본의 ‘역사적 사명’을 논했다. 白鳥敏夫, 『転換日本の諸政策: 高度国防国家の確立より世界新体制の建設へ』, 興成書房, 1941, 33~36쪽.

42 예를 들어 山之内靖, 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 成田龍一 編, 『総力戦と現代化』, 柏書房, 1995; 米谷匡

후적으로 전시를 ‘현대화’의 시기로 규정하는 분석에서 ‘현대’는 시대구분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현대’ 국가로서의 국방국가 규정에서 거론된 ‘현대’는 다만 연대순으로 근대 뒤에 오는 시대구분 범주로서만이 아니라, 근대보다 새롭기 때문에 근대를 초월하여 미래로 열려있는 시간성으로 이해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방국가론의 시간관념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피터 오스본(Peter Osborne)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다. 오스본은 근대를 연대순의 시대구분 범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유의 시대인식과 경험에 기초한 질적인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대를 이전 시기와 달리 질적으로 새로우면서도 끊임 없이 스스로를 초월하는(self-transcending) 시간성으로 이해하는 자의식이야말로 근대를 특징짓는 역사의식이라는 규정에 따른 주장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에서 현재는 최신이자 최선으로 ‘특권화’되며 가장 최근의 과거도 현재로부터 뒤쳐진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라는 역사의식에 현재를 초월해야 하는 당위가 구조화되어 있는 이상,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포스트모던 담론은 이미 근대적이라 할 수 있다.⁴³

일종의 포스트모던 담론으로 전개된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 또한 같은 처지다. 근대를 넘어서겠다는 기획이라고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근대의 시간성 안에서 상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국가의 자유주의 국가체제에 대한 선진성은 역사의 단선적이고 연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 근대적 진보 관념에 기대어 설명되고 있다.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예정된 다음 단계인 ‘현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국가 구상에 일종의 탈근대 지향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해도 결국 여기서 획득하려는 ‘현대’란 ‘초근대’의 상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史, 「戦時期日本の社会思想: 現代化と戦時変革」, 『思想』 882号, 1997, 70~74쪽;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20世紀システム』 全6巻, 東京大学出版会, 1998.

43 Peter Osborne, “Modernity is a Qualitative, Not a Chronological Category”, *New Left Review* 192, 1992, pp. 65~84. 특히 pp. 67~74 참조.

문제는 근대적 진보 관념에서 볼 때 소위 ‘후진국’으로 규정되었던 후발 제국주의 국가에서 국방국가 개념이 생겨나고 국가체제 구상으로 채택된 점이다. 오랫동안 스스로도 당연시했던 ‘후진성’을 어떻게 선진성으로 치환할 것인가? 국방국가를 근대 ‘서양’의 선진성을 뛰어넘어 ‘현대’에 위치시키기 위한 시차(時差)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국방국가 체제 = 전체주의 체제의 우월함에 대한 믿음과 ‘서양’의 것으로 규정된 근대의 극복 가능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어떠한 시간적 장치가 개입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4. ‘초근대’의 심상(心象) 시차(時差): ‘서양’ 근대와 정지된 시간

전시 국방국가 담론은 19세기에 자리 잡은 구미 중심 근대 체제의 시효가 다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근대 체제란, 국가체제로서의 자유주의 국가와 베르사이유 조약·워싱턴 체제·런던 군축회의로 대표되는 구미 중심의 자유주의 세계체제 양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 15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영국·프랑스·미국의 민주주의 국가군”은 과거의 번영에 취해 이미 ‘무기력’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버린 자유주의 체제를 나라 안팎에서 유지하려 드는 ‘현상유지 세력’이 되어버린 것으로 설명한다. 가장 상징적인 예로 1차 세계대전 패전의 경험으로부터 자유주의 국가체제를 극복하고 국방국가로 거듭난 독일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시효성이 다한 자유주의 국가체제를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즉 역동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방국가와 달리 구미는 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사 발전의 필연적 동향’을 거스르는 것으로 묘사된다.⁴⁴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전복 혹은 개혁의 시도는 국방국가로 자임한 국가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

44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国家の綱領』, 9쪽, 12~13쪽.

었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국가의 개입을 일정 정도 허용하여 방임주의 시장경제의 파괴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새로운 자유주의 사조의 대두는 20세기 초를 특징짓는 전지구적인 현상이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에 따르면 19세기 자본주의는 이미 ‘예정조화’나 ‘자기조정’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환’이라 불리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영국에서 19세기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19세기 구미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정치경제체제의 근본원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전식 국방국가론의 전제 자체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다.⁴⁵

동시대인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한정하더라도, 사익과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국가 기획과 관리, 공익이라는 새로운 원칙의 도전 앞에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시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체제 모두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대공황의 경험은 관리나 기획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 수정이 필요함을 전지구적으로 실감시켰다. 제임스 번햄(James Burnham)은 1941년 ‘관리혁명’ 이론을 들고 나와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 자본주의의 종말과 관리사회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모든 관리사회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⁴⁶ 번햄의 전망은 결과적으로 빗겨갔지만, 1930년대와 1940년대는 정치와 경제에서 자유주의의 개조나 극복이 하나의 시대정신을 형성했던 시기였다.

폴 고트프리트(Paul Edward Gottfried)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조차 일본의 국방국가론자들이 배격한 고전적인 자유주의 체제를 재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관리국가(managerial state) 모델과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기법이 정당성을 얻었고, 헤겔의 윤리국가나 유기적 국가관이 유행했다. 자유주의 체제를 국가정체성으로 내세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관리국가 모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상과 현실의 모

45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Rinehart & Company, 1944(한국어판은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길, 2009).

46 Janis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pp. 7~9.

순이라기보다는 20세기 대중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19세기 ‘서양’의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주의 전통을 재고하고 재창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자유주의의 의미론 자체가 변동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래 20세기 관료와 사회계획 입안자의 목표는 ‘19세기 서양의 정치 문화와 도의(morality)의 문화, 즉 부르주아 모더니티와의 전쟁’이었다는 지적인 의미심장하다.⁴⁷

총력전은 이러한 체제 변동을 한층 더 촉진하고 추동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국방국가로 자임했던 나라들과 자유주의 국가의 선봉으로 여겨졌던 미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⁴⁸

그러나 일본의 국방국가 담론에서 구미 자유주의 체제와 의미론에 의식적으로 가해진 변화나 체제 개조 시도는 비가시화되어야 했다. 국방국가 구상의 선진성과 초근대성을 납득시킬, 상상된 시차는 ‘서양’의 근대를 19세기 시점에 동결시키고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획득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국방국가 구상에서 시대착오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었던 ‘서양’의 고전적인 자유주의 체제가 구미에서도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은 잊혀져야 했다. 동시대적 변화는 고정된 과거로 대체되었다. 근대의 시간 틀 속에 온전한 독립 국가로서 일본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지양해야 할 과거로서 ‘동양’이라는 심상 지리의 범주를 창출했던 것처럼,⁴⁹ 일본의 정체성을 ‘현대’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 ‘서양’의 근대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를 지칭하는 범주로 새롭게 상상해야 했다.⁵⁰

47 Paul Edward Gottfried, *After Liberalism: Mass Democracy in the Managerial Stat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3~48. 인용문은 p. xii.

48 山之内靖, 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 成田龍一 編, 『総力戦と現代化』.

49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50 국방국가 구상이 전제로 했던 구미와의 심상 시차는 일종의 ‘조월론적 착시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서영채는 ‘동아시아’ 근대성이나 오리엔탈리즘, 항-오리엔탈리즘 모두 “현재적 권력관계와 현실적 열폐감이 만들어내는 ‘조월론적 착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시대를 사로잡고 있던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착시는 착시이되, 회피가 불가능한 착시”임에 유의해야 한다. 서영채, 「강박과 히스테리 사이, 메이지 유신과 동아시아의 근대성」, 『일본비평』 19호, 2018, 192쪽.

국방국가라는 정체성이 역으로 구미의 동시대적 변화를 사소한 것으로 굴절시키는 일종의 인식론적인 프리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혁신관료나 지식인 가운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관리나 계획이 도입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도는 국방국가처럼 “국가의 본격적인 성격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시적인 경향으로 경시되거나 오히려 현상유지 성격을 노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⁵¹

5. ‘초근대’ 선회(先取)의 여망:

국방국가 전범(典範)으로서의 ‘본연의 일본’

‘서양’의 근대 국가체제를 ‘시의성을 다한’ 것으로, ‘서양’을 ‘근대 질서의 지배자’이자 ‘체제유지 세력’으로, ‘서양’의 시간을 정지된 것으로 상상하여 국방국가 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더라도, 국방국가 가운데 일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국방국가는 독일에서 기원한 이른바 ‘외래’ 개념이었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이 국방국가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이미 존재했다. 게다가 독일의 승전을 근거로 들어 국방국가 체제의 우월함과 선진성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근대 국민국가체제에서 국가정체성이 고유성에 대한 상상 위에 구축된 탓에 일본은 ‘모방’ 혹은 ‘세계정세 추수주의’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의혹이야말로 후대 학자들이 국방국가 구상을 ‘타력본원적인 기회주의’의 산물로 간주한 이유였다.⁵²

51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国家の綱領』, 22쪽.

52 아베 히로즈미는 「기본국책요강」 전문에 기술된 ‘역사적 일대 전환기’, ‘세계 발전의 필연적 동향’과 같은 시대 인식을 ‘안이한 전망’과 ‘타력본원적인 기회주의’로 설명했다. ‘대동아신질서 건설’, ‘국방국가 체제 완성’이라는 기본국책도 그와 같은 기회주의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安部博純, 『日本ファシズム論』, 189쪽.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을 일본 근대를 관통한 ‘세계정세 추수주의’의 대표적인 양상이라 비판했던 후지타 쇼조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국방국가 구상이 위와 같은 의혹의 시선을 의식한 위에 일본 국방국가의 고유성을 담론으로 형성하는 데 골몰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오키후라 이와오의 『국방국가로서의 일본』에도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오키후라는 일본에서 만주사변 이래 국방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 사정에 방해되었다고 회고하고, “유럽 전국(戰局)의 추이에 따라 비로소 이런 문제가 청산된 것”이라 하여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독일의 승전이 미친 영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국가 건설은 독일을 모방(模造)한 것도, 이탈리아를 흉내 낸 것도 아니며, 일본 자신의 국가·민족의 방향에 따라, 일본의 생각에 따라 일본을 국방국가로 새로 만든 것”이라고 역설했다.⁵³

일본 국방국가의 고유성을 전제할 수 있는 여지는 우선 국방국가 안의 다양성을 상정하는 작업, 그리고 특정 사조가 유래한 장소와 변성한 장소를 국가 단위로 분리하여 사유하는 작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구로다 사토루(黒田覚, 1900~1990)는 “국방국가화의 형식은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본을 국방국가의 한 유형으로 위치시켰다.⁵⁴ 구로다는 당시 교토대 법학부 교수이자 헌법학자로 1939년 무렵부터 국방국가 개념을 이론화하는 논설을 발표하여 국방국가론자로서도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자유주의 헌법학에서 출발하여 국방국가론에 이르는 내적 논리를 ‘발전’ 시켜나간 지식인으로, 고노에 신체제 아래 국가체제 구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오키후라 이와오는 ‘근대 문명의 기조인 자유주의’는 프랑스에서 탄생했으나 영국에서 가장 번성했고,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는 새로운 사상인 자유주의에 적합한 요소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쇼’는 이탈리아에서 탄생했지만, “독일인에 적합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번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했다.⁵⁵ 즉, 국방국가 개념은 독일에서 유래했지만, 일본에서 고도의 국방국가가 등

53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9쪽.

54 黒田覚, 『国防国家の理論』, 弘文堂, 1941, 95쪽.

55 奥村喜和男, 『変革期日本の政治経済』, 59쪽.

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국방국가의 고유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일본 국민/민족 공동체의 차별성을 담론으로 재구축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일본 국방국가의 고유성은 역사 혹은 문화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유성 또한 다만 식별 가능한 차이를 넘어 우월성과 선진성에 방점이 찍히는 방식으로 담론화되었다. 일본이야말로 국방국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규정되었던 것이다. 즉, 일본은 흔히 국방국가의 가장 전형적인 현실태(現實態)로 받아들여지는 독일보다 더욱 실재 같은(hyper-real) 국방국가로서 표상되었다.

『국방국가로서의 일본』에 실린 「일본 본연의 모습과 국방국가」라는 제목의 절(節)은 이러한 담론화 양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글은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독일 국방국가의 슬로건을 소환하고, “국방국가란 단 하나의 강력한 의지 아래 국민 전부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봉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라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국방국가의 이상을 선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명했다.

일본이야말로 이 국방국가의 이상에 가장 잘 부합(適合)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의 통치 아래 피를 함께 하는 야마토(大和) 민족이 군신(君臣)의 도리와 부자의 정이라는 실로 감사한, 강력한 유대(むすばれ)에 의해 마음이 하나 되어 일본 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일이 이상으로 삼는 국방국가의 요소는 일본에서 온전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루덴도르프 장군은 일본이야말로 완전한 국방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쇼(大正) 이래 오랫동안 자유주의에 지배되어, 개인주의에 침식당해온 현재의 일본이 반드시 지금의 모습으로 루덴도르프의 찬사에 상응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일본 본연의 모습이 국방국가의 전형임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⁵⁶

56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23~25쪽.

유사한 논리는 당시 출간된 다른 논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무성 혁신과 관료였던 시라토리 도시오(白鳥敏夫, 1887~1949)도 일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체주의 운동이란 곧 복고운동’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⁵⁷ 기획원 연구회는 다이쇼 시기보다도 거슬러 올라가 “메이지 이래의 구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은 건국 이래 세계 둘도 없는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체에 이상적 전체주의가 명백하게 드러나(顯現) 있”으므로, “독일도, 이탈리아도 일본으로부터 배우려 해도 배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41년을 기준으로 독일 전체주의는 겨우 8년 되었으나 일본은 유구한 3천 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 최대의 국방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내놓았다.⁵⁸

위와 같은 본질주의와 복고주의로의 회귀는 당시에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구로다 사토루는 위와 같은 본질주의적인 접근에 ‘전체주의를 실현시킬 수단’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음을 적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구로다 역시 일본 특유의 ‘입헌주의의 구조’에서 이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결국 복고주의적인 본질주의로 회귀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주의·자유주의 후퇴에 따라 반드시 입헌주의의 구조가 붕괴하나, 일본의 입헌주의 구조는 “일본 국가 본래의 공동체적인 요소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라는 의미를 갖지 않았으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할 때도 ‘전체와 개인의 조화’나, ‘개인의 전체에 대한 통합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⁵⁹

요컨대 전시 국방국가 담론은 일본이 국방국가의 이상을 어느 나라보다

57 白鳥敏夫, 『転換日本の諸政策: 高度国防国家の確立より世界新体制の建設へ』, 36~37쪽.

58 企画院研究会 編, 『国防国家の綱領』, 14~15쪽. 奥村喜和男, 『国防国家としての日本』, 25~26쪽에서도 거의 같은 주장이 발견된다. ‘세계 최대의 국방국가’는 오쿠무라의 글 25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59 黒田覚, 『国防国家の理論』, 66~68쪽. 미나가와 마사키는 이와 같은 구로다의 견해가 법치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기보다는 신민의 자유는 신대(神代)로부터 천황을 보익(輔翼)하는 것이라는 식의 당시 복고주의 헌법학 논리를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源川真希, 『近衛新体制の思想と政治: 自由主義克服の時代』, 99쪽.

먼저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역설하기 위해 ‘본연의 일본’이 전체주의 사회였다는 본질주의적인 입장을 세우고, 만세일계의 천황의 존재, 즉 신대(神代)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를 소환했다. 국방 국가가 광범위한 체제 개혁을 포괄한 구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광의국방 혹은 고도국방 이념에 따른 체제의 완성 정도가 아닌, 초역사주의적인 전통으로 일본 국방국가의 고도성을 설명하려 한 점이야말로 당시 국방 국가론이 국가정체성 담론으로 전개되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접근을 일본의 특수성으로 환원해서는 곤란하다.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를 소환하여 중세와의 거리감을 만들어냈듯, 먼 역사는 직전 시대와 차별화되는 시간성으로서 근대를 표상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동원되는 근대적인 시간장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역사주의로의 회귀는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가 근대적인 국가를 초월할 ‘현대’적인 국가체제로 담론화되었음에도 근본적으로는 근대적인 상상력 위에 구축된 기획임을 노정한다.

6. 맺음말: 근대 국민국가체제의 족쇄, 정체성의 강박, 동아시아 질서

이 글은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을 당시의 국가정체성 구축 시도로서 검토하였다. 국가정체성 구축 시도로서 국방국가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협의국방에 초점을 맞춰 1934년 「국방의 본의」에서부터 군국주의로 치닫는 총력전 시기까지를 목적론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경향에서 한 발 벗어나, 국방과 국방국가 체제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국가체제로서의 국방국가는 ‘서양’의 근대를 상대화하고 일본을 ‘현대’ 국가로 상징하여 아시아에서 주도적 위치를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했다. 한편 전시 국방국가 담론이 ‘세계정세 추수주의’ 의혹을 의식한 채 생산되었으며 국가체제의 고유성과 구성주체인 국민/민족 공동체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동원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고유성과 차별성은 근대의 시간성 안에서 일본의 선진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구축되었다. 이 글이 전시 일본의 국방국가 구상을 ‘근대의 초극’이나 ‘근대의 포월’⁶⁰ 논리보다는 가장 선진의 혹은 첨단의 근대, 즉 ‘초근대’의 상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선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강박이야말로 근대 국민국가 단위의 생존경쟁과 발전 정도에 따른 계서적 국제질서를 내면화한 결과다.

이 시기를 근대의 초극이나 포월이 아니라 초근대의 상상이라는 틀로 설명한 것은 전시 일본의 근대 비판이 불철저했다거나 기만적이었음을 거듭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다. 일본 특수성론을 주장하기 위함도 아니다. 근대와 구분되는 것으로 상상된 ‘현대’ 개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시간성과 역사의식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단선적 진보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대를 초극하지 못한 것은 전시 일본만이 아니다. 국민국가 단위의 생존경쟁과 발전 정도에 따른 계서적 국제질서를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은 20세기 후반 또 한 차례의 포스트모더니즘론과 탈구축주의 입장에 선 국민국가론의 세례를 거친 후인 현재에도 우리 안에 온존한다. 브랜드 내셔널리즘의 전지구적인 유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넘어 선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강박은 현재진행형이다.

마지막으로 국방국가로 규정된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당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고찰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민족 제국이라는 일본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방국가가 본질주의를 빌려 설명된 고유한 일본문화에 기댄 정체성 개념이자 경쟁에 근거한 위계와 근대화 선취의 지향을 내면화한 기획이었다면, 국방국가 구상은 제국 일본의 아시아 광역질서 구상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전시 일

60 교토학과 사상과 근대의 포월에 관해서는 장인성, 「세계사와 포월적 주체」, 『일본비평』 19호, 2018, 272~307쪽. 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의 ‘초근대’=근대의 포월은 근대의 초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초근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에서 국방국가, 총력전, 대동아공영권은 삼위일체로 언급되곤 했다. 그러나 자급자족을 위한 블록경제 구상과 아시아 지도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에 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국방국가로 국가정체성을 설명하려는 담론에서 아시아 제 민족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제시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 국방국가라는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동아시아 질서를 관련지어 분석한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전후 역사학의 일국사 중심 서술 탓만은 아닌 셈이다.

홍종욱은 ‘경제신체제’와 같은 국방국가 구상의 정책강령 실현을 고도 국방국가 건설과 동일시했던 식민지 조선의 전향 좌파 지식인 박극채의 1940년대 초반 언설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이는 국방국가와 동아시아 광역질서 사이의 관계가 식민지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홍종욱에 따르면, 박극채는 고도국방국가, 동아신질서, 경제신체제를 ‘삼위일체’로, 경제신체제를 ‘발전의 내포적 경향’으로, 동아신질서를 ‘발전의 외연적 확충’으로 그리고 고도국방국가를 ‘발전의 기동력이자 지도세력’으로 규정했다.⁶¹ 그러나 홍종욱도 인정하듯, 식민지라는 특성상 경제신체제론은 조선에는 정치성이 배제된 개발론으로 도입되었다. 제국질서 안에 종속된 채로 일만지 경제블록에서 조선의 존재감이 약해질까 우려하여 국방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식민지의 사정을 중국이나 만주, 혹은 비식민지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⁶²

국방국가 구상에서 일만지(日滿支) 블록이나 대동아공영권 같은 아시아 광역질서는 관념상 ‘지도국’으로서의 일본과 아시아 제 민족 사이에 ‘자발성’을 매개로 한 유기적인 결합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당시에든 국방국가가 이러한 유기적인 결합을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구로다 사토루는 1939년 2월 시점에 동아 제 민족들 사이에 운명공

61 홍종욱, 「해방을 전후한 경제통제론의 전개: 박극채 · 윤행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호, 2007, 315쪽.

62 홍종욱, 「중일전쟁기 조선 지식인의 통제경제론」, 홍종욱 엮음, 〈식민지/근대 초구〉 연구회 기획,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구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92쪽, 303쪽.

동체 의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국방국가 관념 자체로는 바로 동아신질서 관념과 결합될 수 없음을 환기시켰다. 나아가 그는 ‘일본 민족주의의 민족적 예고이즘’의 소지를 지적하면서 “국방국가 관념이 일본민족의 운명 공동 의식에만 입각해 있는 한, 동아 제 민족을 포함하는 지역의 운명 공동 의식에 기반을 둔 동아신질서의 관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함을 의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⁶³

즉 국방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과 아시아 지역 공동체 의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기 혁신’이 전제되어야 했다. 임성모가 미키 기요시(三木清)의 동아협동체 구상과 문화주의 입장의 혁신론을 분석하면서 지적했듯, “민족을 넘어서는 어떤 전체”, 혹은 ‘보편의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대화와 탈근대화가 동시 진행되는 이중적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⁶⁴

그러나 ‘초근대’의 국가정체성에 집중한 국방국가 구상이 탈근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혁신의 계기를 포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는 적어도 중일전쟁 초기까지는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혁신과의 ‘전시변혁’ 시도에 따라 “침략전쟁과 총력전 체제가 의도치 않게 아시아의 해방과 국내 변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었”으나 체제유지파의 공격으로 1940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지적했다.⁶⁵ 국방국가론이 국가정체성 담론으로 전개된 시기는 ‘전시변혁’ 시도가 퇴색한 시기와 맞물린다. 국방국가로 상상된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탈근대화의 계기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던 점과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63 黒田覚, 『国防国家の理論』, 249쪽, 259쪽. 이 책은 기간(既刊) 논문을 묶어낸 것으로, 인용한 내용이 담긴 글은 1939년 2월에 최초 발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59쪽.

64 임성모,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 『세계정치』 26집 2호, 2005, 105~106쪽. 이중의 혁신 개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米谷匡史, 『戰時期日本の社会思想: 現代化と戰時変革』, 87~92쪽.

65 米谷匡史, 『戰時期日本の社会思想: 現代化と戰時変革』, 70쪽, 81~96쪽.